

2013 한국노총 기본교안 3

현장 노동조합의 든든한 울타리 한국노총

- 목차 -

- 노총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
- 노동조합은 왜 상급단체가 필요한가
 - 노동조합의 기본 역할
 - 노조상급단체의 필요성
- 한국노총의 구성과 운영
 - 한국노총의 구성
 - 한국노총의 의사결정체계
 -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지부의 역할
- 한국노총의 역사와 운동방향
 - 한국노총의 역사
 - 한국노총 운동의 특징
 - 노동조합운동의 현실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1 한국노총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

1. 우리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 나의 노동조합이 어느 노총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는 어느 연맹 소속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조합원은 몇 %나 될까? 노동조합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본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어느 연맹 또는 산별 소속인지 잘 모르는 조합원이 의외로 많을 것이다.
- 이는 조합원의 참여가 저조해진 노동조합운동 전반적인 상황때문이기도 하지만, 노조 상급단체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연대가 없었거나 노조간부들 위주로만 상급단체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 현장조합원들의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일반적으로 '단위노조', '개별노조', '현장노조'라고 말하고, 이러한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들이 산업별 또는 지역별 공통성에 따라 함께 결성한 연합체(연맹, 산별노조, 지역본부 등) 또는 이들의 총연합체(노총)를 '상급단체'라고 부르는데, '상급단체'라는 표현이 개별 노조를 명령감독할 수 있는 권력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조합원들의 한국노총에 대한 이미지는?

- 많은 사람들이 한국노총은 협상만, 민주노총은 투쟁만 하는 조직으로 인식하거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모두 과격한 이익집단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 이는 대부분 매스미디어(TV 뉴스나 신문, 인터넷)를 통해 상급단체에 대한 소식을 접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더욱 언론에서 유포하는 이미지만을 진실처럼 생각할 것이다.

※ 물론 한국의 노동운동이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첫째, 6-70년대 국가 경제성장의 필요에 따라 저임금과 사회적 불평등을 과도하게 강요

받아온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이 80년대 들어 절박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 둘째, 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본격화되며 일자리의 안정성이 급격히 약화되는 한편 사회안전망은 빈약하였기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투쟁이 확대되었다.

3. 한국노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왜 필요한가?

- 먼저 단위노조가 추구하는 운동의 목표가 상급단체를 통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노조상급단체 자체가 소속 단위노조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노조상급단체가 현장 조합원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경우 정치권력과 자본의 막강한 영향력에 의해 자주성을 상실할 수 있다. 노총에 대한 왜곡된 정보나 부정적 이미지는 현장조합원들로 하여금 노조상급단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 노총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역할을 소홀히 하게 한다.
- 즉, 현장조합원들이 노총을 제대로 알아야 노총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노총 또한 현장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은 왜 상급단체가 필요한가

1.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 공급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결성한 조직이다. 노동자의 권익은 '인권 영역'(인격적 대우), '경제 영역'(정당한 임금), '건강 영역'(안전한 작업환경, 충분한 휴식), '사회 영역'(정치참여권리, 실업보험) 등 다양한 영역의 요구로 나타난다.
- 노동자의 다양한 권익향상의 요구는 사업장 단위의 노사교섭이나 투쟁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산업·지역별 또는 국가적 범위의 노-사, 노-사-정 협상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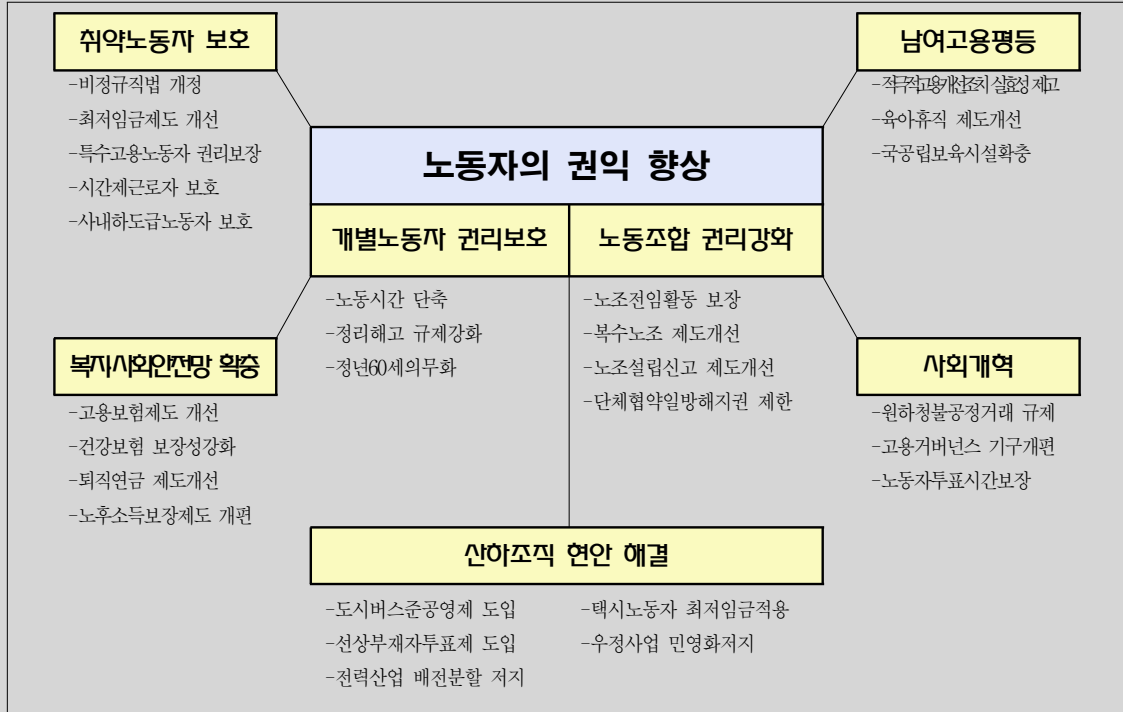
2. 노조상급단체의 필요성

1) 법·제도 개선

-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국가의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노동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와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며, 협상과 투쟁으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쟁취하더라도 사측에 의해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다.
- 노동자의 근본적 권익향상에 있어 법·제도 개선은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책제시, 여론조성, 정치권과의 협상 등을 수행할 상급단체가 요구된다.
- 경제가 발전하고 노동운동이 성장할수록 개별사업장 단위의 임금인상 요구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정치적·사회적 권리 향상, 복지제도 확충 등 법·제도 개선의 요구가 중요해진다.
- 법·제도의 개선은 노동자 일반적 권리 외에도 산업별, 지역별 요구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산별·연맹이나 지역본부·지부의 활동과 총연맹의 지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 한국노총의 법·제도 개선활동

○ 법·제도 개선활동의 목표 및 내용(예)



○ 활동방식

- 정부위원회 참여 : 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노인장기요양위원회 등
- 대국회·정당활동 : 국정감사 질의요청, 국회 환노위 간담회 등
- 여론화 및 연대활동 : 각종 토론회,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등
- 투쟁·압박 : 노동자대회, 정당·노동부 항의방문,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등

2) 사용자단체 및 보수언론에 대응

- 전경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사용자단체는 노조의 현장장악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인사노무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반박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논리를 개발·유포하며, 정치권에 대한 로비와 압력으로 자본

의 이익을 유지·강화하고 있다.

- 한편 보수언론은 철저히 자본의 편에서 막강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을 동원해 노동자의 요구를 왜곡하고 비난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 조합원들의 참여동력을 약화시킨다.
- 노조상급단체가 사용자단체들에 대해 일면 협상, 일면 투쟁을 전개하고 보수언론과의 여론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이들의 영향으로부터 개별 노동자와 노조의 권익을 지킨다.

3) 개별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 극복

- 노조가 새로 설립되었거나 사측이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입장에 섰을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개별 노조의 힘만으로 투쟁에 승리하기 쉽지 않다.
- 상급단체가 다른 노동조합들의 연대투쟁을 조직하고, 교섭과정에서 사측을 압박하거나 행정관청이나 정치권의 개입을 이끌어냄으로써 개별 노조의 투쟁을 지원한다.

※ 한국노총의 현장투쟁 지원사례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매각 저지투쟁
: 현장투쟁에 대한 실무적 지원뿐만 아니라 각 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분매각 철회 또는 신중 입장을 이끌어 냄으로써 민영화·매각을 저지함
- 서희산업노조 정규직화 투쟁
: 각 정당 대표 및 환노위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모그룹에 대한 압박과 함께 파업투쟁에 대한 산하조직의 연대와 지원을 조직화함
- 무주덕유산리조트노조 사수 투쟁
: 상경투쟁에 대한 전폭적 지원, 그룹본사 관리자들에 대한 고발 및 사법처리 촉구, 여야 국회의원의 중재 등의 압박을 통해 타결을 이끌어 냄

4) 현장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지원

- 개별 노동조합에서 전임간부나 예산이 부족하여, 또는 사업경험이나 전문적 역량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활동이 있는데, 이를 상급단체가 담당하거나 지원함으로써 현장 노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 한국노총의 일상적 현장 지원 활동

-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 중앙법률원 및 전국 각지의 노동상담소에서 조합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급 조직의 소송, 구제신청 등의 법률구조활동도 펼침
- 간부교육 및 강사지원
 - 중앙교육원은 노조간부기본교육 및 홍보선전교육, 여성활동교육, 노동법률교육 등 다양한 실무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산하조직 간부와 조합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노총 교육국에서도 각종 강좌 및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산하조직의 간부·조합원 교육을 위한 강사를 파견하고 있음
- 각종 조사 및 연구활동
 - 중앙연구원과 정책본부 및 사무총국 각 본부에서 표준생계비 산출, 전체 조직의 임금·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현황 조사, 외국 노사관계 및 각종 정책 사례 등에 대한 분석 등을 진행해 산하조직의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활동
 -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작업관련성 질환예방 및 작업장 개선을 위한 안전보건개선활동, 산업재해 현황 실태조사, 각급 조직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전문가 양성사업 등을 전개함

5) 노동조합운동의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 제시

-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실의 법·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 '노동조합운동'의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

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 역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노총, 또는 산별연맹, 지역 본부의 역할이다.

- 현시기 노동조합의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전략으로 산별노조 건설, 지역일반노조 활성화 등을 제시한다거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이의 1차적 단계로써의 개혁정당과의 정책연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러한 예가 될 수 있다.

※ 한국노총 로고와 그 의미



현재의 한국노총 로고는 2006년 노총 창립60주년을 맞아 조직혁신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두 사람의 노동자가 힘찬 팔을 뻗고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위에서 형상화한 모습으로써, 붉은 색은 노동자의 열정을, 파란색은 희망과 생동감을 표현한 것이다.

3 한국노총의 구성과 운영

1. 한국노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 회원조합

- 한국노총은 산별노조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연맹을 회원조합으로 하여 구성된다.
- 2013년 6월 현재 한국노총의 회원조합은 26개이다.

※ 개별 조합원이 한국노총에 직접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노조들이 산업별 특성에 따라 공동으로 결성한 산별노조 또는 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하는 것이다.

신규 산별·연맹의 회원조합 가입 또는 기존 회원조합의 탈퇴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국노총 위원조합																									
건설산업노조	한국노총연맹	사립대연맹	식품산업노련	의료산업노련	KEF연맹	아파트노련	철도산업노조	고무산업노련	전택노련	우정노조	관광서비스노련	연합노련	자동차노련	출판노련	금속노련	화학노련	담배인삼노조	김영산업노조	해상노련	항공노련	I·T 사무노련	외기노련	고용노련	광산노련	전기자통신노련

■ 지역본부/지부

- 서울시와 6개 광역시, 9개 도 등 16개 시·도에 지역본부를 두고, 54개 시·군·구에 지역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 사무총국/부설기관

- 한국노총 의결기구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일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7개 본부(정책/조직/홍보선전/여성/대외협력/사업지원/산업안전보건)로 구성된 사무총국을 두고 있다.
- 또한 중앙법률원/ 중앙연구원/ 중앙교육원/ 장학재단/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등의 부설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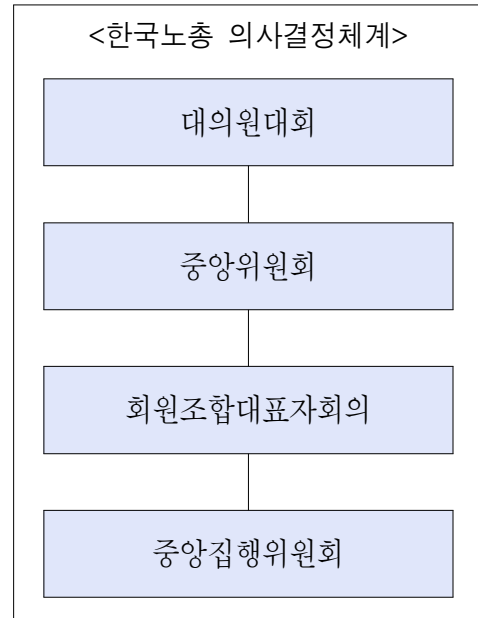
2. 한국노총 지도부는 어떻게 선출되는가?

- 3년마다 1월 중 선거인대회를 개최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위원장, 사무총장을 선출한다(런닝메이트제).
- 선거인은 각 회원조합에 조합원 200명당 1명씩 배정한다.
-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상임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3. 한국노총의 사업 결정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나?

■ 대의원대회

- 한국노총의 최고의결기구는 대의원대회로써 매해 2월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 대의원은 각 회원조합(산별연맹)에서 직접·비밀·무기명으로 선출하며 조합원 8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한다.
- 규약 제정 및 개정,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활동방침과 계획 수립, 정당창당 및 대정당 관계설정, 대선 지지후보 결정 및 위원장 정계진출, 중앙위원 선출 등을 심의·결정한다.



■ 중앙위원회

-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결의기구로써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및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 각종 규정의 제·개정, 시도지역본부 설치 및 폐합, 사업별 위원회 및 부설기관 설치 등을 심의 결정한다.

■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 중앙집행위원회

- 노총의 일상적인 사업 의결은 중앙집행위원회나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진행한다.
-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는 회원조합에 대한 제명 동의 또는 회원조합간 조직관할 분쟁의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당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수립한다.
-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총 임원과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으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상정안건을 심의한다.

4.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및 지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나?

■ 산별노조 또는 연맹

-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단위노조들의 연합체로서 공통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거나 단위노조 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특히 산업별 공통성에 기반해 해당 산업에 특정한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이 기본이다.
- 또한 신규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설립을 지원하여 조직을 확대하거나, 체육대회, 수련회 등을 통해 단합과 결속을 높임으로써 조직력을 강화하는 사업도 일상적으로 진행한다.

※ 공통의 현안문제 해결 사례

- 금융노조 : 금융의 공공성 강화 운동, 영업시간 단축 등
- 금속노련 : 원하청불공정거래 개선 촉구
- 자동차노련 : 버스 준공영제 시행
- 의료산업노련 :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활동

※ 산별노조/연맹의 단위노조 지도·지원활동

- 연맹별 또는 제조산별 임단투 지침 마련
- 각종 간부교육 개최
- 단위노조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 지원
-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휴양시설, 장학금제도 운영 등 각종 복리후생 제도 마련

■ 지역본부 / 지역지부

- 노총의 정책과 사업을 지역차원에서 실천한다.
- 각 지역별로 편재된 단위노조를 묶어 지도하거나 지원한다.
- 지역 자체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한다.

토론해봅시다

1. ‘한국노총’ 또는 ‘노동조합’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말해 봅시다.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업 또는 활동을 제안해 봅시다.

2. 우리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상급단체(산별연맹/지역본부·지부/노총)의 역할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4 한국노총의 역사와 운동방향

1. 한국노총의 역사

■ 한국노총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 한국노총의 역사는 적어도 민주노총이 결성되기 전까지는 그 자체로 해방이후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로써, 당시 한국노동운동이 처한 시대적 한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 특히 해방이후와 군사정권 하의 한국노총은 반공주의와 노동통제가 극심한 조건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물론 당시 현장노동자들의 열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때로는 독재권력의 노동통제정책에 무기력했던 아픈 역사에 대해 충분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지난 과거가 현재의 운동을 평가하는 논리일 수는 없다.

■ 형성과 전개 (해방~80년대 중반)

- 1946년 해방이후 심각한 이념갈등 속에 좌익계열의 노동조합 전국조직인 전평(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회)에 대항한 우익정치결사체로서 '대한노총'이 결성되었으나, 전평 해체 이후 노동자단체로서의 성격이 점차 강화되었고 53년 노동법 제정에도 큰 역할을 했다.
- 6,70년대 공업화가 가속화되고 경제의 고도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을 발판으로 삼으면서 기층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 확대됐다. 한국노총은 제도개선 활동을 정책활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연맹과 지역차원의 공동투쟁도 전개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변화와 개혁 (87년~96년)

- 80년대 중반 3저호황에 따른 경제성장과 87년 민주화항쟁을 계기로 노동자 대투쟁과 노조결성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노동조합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한국노총 역시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화하는 한편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는 참여전략'이라는 운동기조를 확립했다.

- 보다 급진적인 민주노조운동진영이 민주노총으로 분화해 나감에 따라 유일노총 시대가 마감되고 양대 노총간 경쟁체제에 접어들었다.

■ 도전과 투쟁 (97년 이후)

- 97년 IMF 구제금융사태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비노동의 유연화와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었고 노동운동은 노조의 권리를 제약하려는 자본과 정권에 의한 외부적 위기, 조직률의 저하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내부적 위기에 맞닥뜨렸다.
- 한국노총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는 합리적 노동운동이라는 기조하에 노사정합의를 통해 노동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거나 전조직적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이나 노동법의 개악을 저지해왔다.
- 하지만 지난 MB정부의 노조법 개악으로 노동조합운동에 큰 타격이 가해짐에 따라 새정부하에서 노동의 권리를 되찾는 한편 노동·복지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사회제도를 구축하도록 한국노동운동의 조직력과 사회적 위상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2. 한국노총 운동의 특징

■ [합리성]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는 합리적 노동운동 추구

- 한국노총은 투쟁을 위한 투쟁을 지양한다.
- 투쟁일정을 미리 못박아놓고 현실과 상황에 관계없이 밀어 부치는 투쟁, 어떠한 형태의 타협과 협상도 거부하는 무책임한 투쟁, 협상을 폭로와 쟁점화하는 공간으로만 자리매김하는 투쟁, 투쟁의 명분을 쌓기 위해 협상하는 무책임한 운동방식은 조합원과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한국노총이 투쟁을 등한시한채 대화와 협상만을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 조직력과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협상력이 높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나 정부가 대화에 성의없이 임하거나 노동자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때 전면적인 투쟁으로 대응한다.

■ [책임성] 사회적 대화와 참여를 중시하는 책임있는 노동운동 전개

- 한국노총은 자율적이고 충실한 사회적 대화가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통합 및 참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판단하며,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히 노동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제사회정책의 결정, 노동관계법의 제·개정, 각종 사회보험의 운영과 관련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여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3. 노동운동의 현실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1) 노동운동의 현실

■ 객관 상황

- 2007년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적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고 체질이 약한 한국경제는 저성장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가계부채가 경제의 심각한 위협요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의 악화 속도가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한편 물가·집값·교육비 등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높아져 노동자 서민의 빚이 대폭 늘어났다.
-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력 저하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한편 저임금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임금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의 보편화와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대로 고용불안이 만연해 있다.
- 노사관계 역시 개정된 노조법이 노조 전임자를 축소시켜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한편 사용자의 민주노조 파괴 및 노동운동 무력화 시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 주체 상황

-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규직-대기업-남성노동자 중심의 내부적 비대칭성으로 인해 절대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면서 대표성이 약화되었다.

- 기업별 노조체제의 한계로 인해 기업내 실리만을 추구하는 운동노선이 강화됨으로써 노동운동의 지지기반을 폭넓게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안적 비전과 이념, 전략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2) 한국노총의 운동방향

■ 한국노총의 운동이념 : 사회개혁 노조주의

- 노동을 둘러싼 내외적 요건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위기에 직면해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노총은 새로운 운동이념을 제기하였고 이를 “사회개혁 노조주의”로 부른다.
- “사회개혁 노조주의”는 기존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큰 흐름인 실리적 조합주의와 혁명적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 ‘실리적 조합주의’는 노동조합을 소속 조합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로 보는 관점으로 사회 전체의 이슈보다는 작업장의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직업간·산업간 이동성이 높아지고 고용·복지 등 사회적 이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 ‘혁명적 조합주의’는 노동조합운동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는데서 자기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으로써, 정치적 이슈를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작업장 이슈를 소홀히 하게 되고, 뿐만아니라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에 종속되어 노동운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 “사회개혁 노조주의”는 자본주의 질서내에서 조합원들의 이익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변화를 추구한다.
- 한국노총의 “사회개혁 노조주의”는 투쟁과 교섭 모두를 강조한다. 즉 국가와 자본이 노동조합의 존재의의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참여나 개입을 거부할 경우 이에 맞서 조합원 대중의 투쟁과 사회적 연대로써 사회전체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국가와 자본이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정운영 및 기업운영의 파트너로써 함께 하고자 한다면 교섭과 사회적 대화로써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개선을 꾀하려는 것이다.

■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사회 :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

- 신자유주의는 인간성 상실과 자연환경의 파괴, 고용과 소득불안의 극대화, 국가

- 간 개인간 소득격차 확대, 세계적 경제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증대를 가져왔다.
- 숨쉬틈없는 경쟁과 유연화체제 속으로 노동자와 서민을 집어삼키는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며, 이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시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가야 한다.
- 한국노총은 이를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로 정식화하였다.



-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는 평등, 복지, 녹색, 통일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미래노동사회이자 노동자가 꿈꾸고 만들어 나갈 새세상을 의미한다.
- ▷평등국가 : 우리 사회전반에 팽배해있는 차별, 특히 고용 및 직업생활상에서 차별과 대-중소기업간, 수출-내수간 불균형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 ▷복지국가 : △공정한 경제 △좋은 일자리 △인간다운 노동 △보편적 사회보장 △평등한 교육기회 △돌봄의 사회화·공공화를 이루어야 한다.
- ▷녹색국가 :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의 고갈은 금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자원·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 ▷통일국가 : 남북합의서 및 6.15공동선언에 입각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국가 수립으로, 분단대결구조하의 과도한 국방비용을 안정적 일자리창출과 보편복지에 이전하고 나아가 동북아평화구조정착과 경제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토론해봅시다

1.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향후 어떠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2.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산하 노동조합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해 봅시다.